

보도시점 2023. 8. 18.(금) 08:30 배포 2023. 8. 18.(금) 08:30

## 추석물가 안정,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민생안정·내수활력 제고 노력 강화

-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9월초 추석민생안정대책 및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수소버스 '30년까지 2.1만대 이상 확대 추진 및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투자 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8.18(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❶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❷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문체부), ❸수소버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❹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및 향후계획(중기부)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통계청 등

방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감소세 둔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안정과 경기반등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8말→10월말), 닭고기 신규 할당관세 물량 3만톤 신속 도입(9.1일~), 성수품 수급관리 등을 통해 추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동행세일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8.10일)에 따라 항공편 증편·중국내 비자 신청센터 확대,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초 발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 교체 지원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 국내기업의 해외창업 지원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11)

지금부터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부동산 불안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물가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대응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 >

특히, 추석(9.28일)을 대비하여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국내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sup>1)</sup>를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한편, 폭염·호우 등으로 가격이 올랐던 배추·무·상추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출하 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최근 도매가격이 점차 안정화<sup>2)</sup>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서는 9.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하여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겠습니다.

1) 현재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 △25% (경유-LPG) △37%

2) 배추 경락가격(원/10KG): ('22.8)14,647 ('23.7.17) 4,326 (7.24)11,583 (8.9)17,640 (8.15)11,186 (8.16)8,851 (8.17)10,283  
 무 경락가격(원/20KG): ('22.8)22,021 ('23.7.17)12,962 (7.24)14,557 (8.9)23,991 (8.15)14,822 (8.16)13,395 (8.17)14,736  
 상추 경락가격(원/100g): ('22.8)1,387 ('23.7.12)1,404 (7.22)4,211 (8.11)1,498 (8.14)900 (8.15)677 (8.16)975 (8.17)1,221

아울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9월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 <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

지난 8월 10일 중국은 '17년 이후 6년 5개월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방한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방한 관광국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은행('23.2)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증가는 우리 GDP 0.08%p 개선 효과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경절 연휴(9.29.~10.6.)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오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9월초에 발표하겠습니다.

## < 수소버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 >

정부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30년까지 30만대의 수소차 보급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9년 5천대이던 수소차 보급량이

'23년 상반기 3만3천대에 도달<sup>3)</sup> 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버스를

'30년까지 2만1천대 이상 보급<sup>4)</sup>하여

수소차 확산을 전인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소버스 운행사업자에 대한 수소연료전지<sup>5)</sup>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모든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장\*하고,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 수소버스 보증기간 5년 또는 50만km vs. 전기버스 보증기간 9년 또는 90만km

아울러, '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야간시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수소차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

'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총 4.4조원<sup>6)</sup>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3) 수소차 보급실적(만대, 누적) : ('19) 0.5 → ('20) 1.1 → ('21) 1.9 → ('22) 2.9 → ('23.상) 3.3

4) '23년 상반기 기준 수소버스 보급실적(누적) : 343대 / '23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예산: 1,620억원

5) 스택(Stack) : 수소-산소 결합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장치

6) 국내 상반기 벤처투자(조원) : (19)3.6 ('20)3.2 ('21)6.6 ('22)7.6 ('23)4.4 (전년비 △42%)

국내 벤처투자 부진은 투자여력의 부족보다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 거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벤처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4.27일 개정안 통과) 등  
현재 추진중인 벤처투자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신·기보, 중진공 등 통해 초·중기 성장기업 등에 대한 정책 융자 시행(약 2.2조원)

(모두말씀 종료)